

언론 : 자유의 수호자인가 프라이버시의 침해자인가

R. 노박
칼럼니스트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수호자이면서 아마도 민주국가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일 것입니다. 자유로우며 늘 깨어있는 언론은 언론 외에도 정부운영이나 공공사업의 상황에 관한 정보에 접할 수 없는 국민의 눈과 귀의 기능을 합니다.

그럼에도, 새로이 출현하는 전 세계의 많은 민주국가들은 자유 언론이 갖는 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규제받지 않고 제멋대로인 뉴스 매체가 공공의 질서, 정부의 효과적인 운영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서방 국가 특히 미국에서의 언론자유와 신성함과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언론규제 욕구 사이에는 갭이 존재합니다. 의회민주주의는 국민의 동의를 그 바탕으로 합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 그 자체입니다. 미국 건국 당시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 논문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제국의 한 울, 한 울은 국민의 동의라는 견고한 기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국력이라는 물결은 합법적인 모든 국가기관의 순수한 원천으로부터 곧바로 흘러 나와야 한다.」 언론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동의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원천을 계속 순수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언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의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관해 보도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구속받게 된다면 국민은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부여한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언론 자유의 규제는 권력을 남용하려는 자들을 돕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고 언론이 절대 그 힘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금 자유 언론은 실수도 하고 어떤 경우 죄없는 사람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언론은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지속되기 위해 필요악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상스러운 비난의 공격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사람들에게는 자유 언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다지 위안이 안될 것입니다. 공공의 관심사에 관해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없이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런 균형의 원리(balancing act)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국민의 알 권리를 함당하지 않은 거짓되고 악의에 찬 공격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적 비난의 표적이 공직자의 사생활인 경우에는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집필자는 공직자의 사생활을 비난할 수 없도록 제약

받아서는 안됩니다. 많은 경우 공직자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는 유권자로 하여금 그 사람이 공직을 맡기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공직자는 일반 국민만큼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진실이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가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반 개인은 자신에 관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예훼손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직자와 일반 국민에게 똑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언론은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사실에 대한 보도에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종종 증명하기 어렵고 비관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인물의 됨됨이에 관한 문제일 경우에는 진실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론의 자유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위협은 늘 존재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미국 건국 당시 기초가 되었던 원칙들을 계속해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수정헌법 제 1 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 원칙들은 지난 2 세기 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의 권리인 자유언론은 국민이 「합법적인 모든 국가기관의 순수한 원천」으로 남도록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일 때 조차도 언론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